

# 북한에서의 국가와 사회 : 시민사회론은 적용 가능한가?

이우영(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회학)

## 1. 머리말

정상회담과 더불어 북한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고 지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나, 북한의 변화 여부 등 과거에는 북한 관련 종사자나 연구자만의 관심사였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언론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까지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사회적인 관심 고조에 부합할 만한 북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그다지 충분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소원’인 통일의 상대편이며, 어떠한 점에서는 남한 체제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sup>1)</sup> 북한에

---

1) 분단은 일반인의 사회심리적 특성으로부터 체제의 성격, 사회 발전 전략에까지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백낙청, “분단체제의 인식을 위하여”, 『분단체제 변혁의 공부길』(서울 : 창작과 비평사, 1994) 참조. 단순히 분단 상황이라는 구조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분단의 한 축인 북한이 어떤 정책을 취하는가에 따라 남

대한 연구나 분석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일종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다. ‘통일이 중요하다, 북한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연구나 분석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다음의 몇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외부와의 접촉을 극도로 제한하는 북한의 폐쇄 정책으로 연구나 분석에 필요한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경제 통계나 인구 통계 등 기본적인 정보를 외부에 공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부 사람들의 출입도 엄격하게 통제함으로써 사회 조사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기초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북한에 대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연구 분야에 대한 편중을 초래한다. 예를 들어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자료에 토대를 둬으로써 정부의 정책이나 지향하는 이념에 대한 연구는 많아질 수 있으나, 정책의 효율성이나 이념에 대한 일반 인민의 수용 정도 등에 대한 연구는 본질적으로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이념적 관점에 따라 북한을 연구하여 왔기 때문이다. 사회 현상 연구에서 이념의 개입 문제는 오랫동안 논란거리였지만, 북한 연구의 이념 개입은 차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연구자가 자신의 관점을 유지하면서 현상을 분석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자신의 이념을 증명하기 위하여 현상에 대한 분석을 꺾어 맞추는 경향도 없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전쟁 이후 남북한간의 갈등이 첨예화되면서 ‘북한은 나쁜 것’이라는 전제하에 수많은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그 목적은 북한체제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있었다. 1980년대에 부각된 진보진영의 북한 연구 또한, 이와 같은 문제에서 그다지 자유롭지 못하였

---

한체제가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고, 이것은 북한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잠수함 침투와 공안정국의 조성, 팀스피리트 기간의 북한의 동원체제 작동 등이 작은 예가 될 것이며, 1970년대 남한의 유신헌법과 북한의 헌법개정은 더 큰 예가 될 수 있다.

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역시 북한의 실체를 파악하기보다는 기존 연구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가를 증명하는 데 일차적으로 목표를 두어 왔다.

셋째, 학문적 편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북한 연구는 정치학이 중심이 되어 왔다. 분단이 정치적인 문제이고, 전쟁과 이후 양체제의 갈등이 정치학의 중심 과제이기는 하지만 북한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는 다양한 학문 분야의 연구를 필요로 한다. 경제학이나 사회학과 같은 구조를 주로 다루는 학문으로부터 심리학이나 인류학과 같이 사람과 일상 생활을 다루는 학문에 이르기까지 북한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넷째, 북한 연구에 대하여 법적 제도적 제약이 많았다는 점이다. 북한 연구에 필요한 자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현재 취득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하는 데도 여러 가지 제한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보안법을 비롯한 각종 시행령 등으로 자료에의 접근 그리고 자료 활용이 쉽지 않다. 그리고 정보를 갖고 있는 정부기관은 자신들의 입장을 부각할 수 있는 자료들을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자유로운 연구는 근본적으로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북한 사회가 갖고 있는 특수성을 간과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강조하여 왔다는 것이다. 국가사회주의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등 일반적인 사회과학의 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독특한 구조이다. 따라서 일반 사회과학이론을 적용하기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하나의 사회체제로서 갖는 기본 속성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구들은 사회주의 일반이론(때로는 자본주의 사회의 분석틀)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반대로 북한의 특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북한을 일종의 돌연변이로 인식하였다는 것이다.

북한체제의 성격 규정에 대한 논의도 지금까지의 북한 연구가 일반

적으로 갖고 있었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북한 체제의 성격을 이야기하면서 이념적 편향에 사로잡혀 있거나, 몇 가지 현상들을 가지고 전체 사회 구조를 규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북한체제의 성격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북한체제를 독재체제로 규정하고 이를 증명하는 데 치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사회주의 국가 분석이론이나 독재체제 분석틀로서 이를 뒷받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북한체제에 이념적 친화성을 갖고 있는 연구들은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체제의 성격을 다루고 있는 기존 연구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문제는 무엇보다도 과학적 전망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데 있다. 독재체제로 북한을 성격 규정하는 경우 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독특하고 우수한 체제로 북한을 인식하는 경우 북한은 현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와 같은 분석들은 어떻게 보면 논리적 동어반복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어느 정도 수준에서 북한체제의 성격을 설명하여 준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북한체제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은 불가능해 진다고 볼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논의가 부분한 현실을 고려할 때 과거 북한 연구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분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체제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현 단계 북한체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변화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와 사회라는 관점에서 북한체제의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변화의 관점에서 국가-사회 관계를 검토하고, 시민사회론이 북한체제의 성격과 변화를 전망하는 데 어느 정도 유의미한지를 따져 볼 것이다.

## 2. 이론적 논의 : 국가와 시민사회

### 1) 사회주의와 국가

근대 국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 것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가 확대 발전되면서였다고 할 수 있다. 초기 자본주의, 즉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시기에 국가의 역할은 단순하였으며, 이와 같은 생각은 전후 자본주의의 중심을 이룬 미국의 다원주의 국가론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케인즈주의의 개입을 비롯하여 자본주의체제하에서도 복지를 명분으로 국가의 역할은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1960년대 후반부터 선진자본주의체제는 경제성장에서 애로를 겪으면서, 그리고 후진자본주의체제는 중앙집중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면서 국가의 중요성은 더욱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2)</sup>

근대 사회에서 국가의 역할은 마르크스주의의 전통적인 관심사 가운데 하나였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국가는 지배적인 자본가 계급의 도구’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의 하부 구조가 공산주의로 변형되면 사라지거나 소멸하게 되는 부수적인 현상이 된다. 전통 마르크스주의의 국가관은 엥겔스의 다음의 말에 잘 드러나고 있다.

국가란 결코 외부로부터 사회에 강요된 권력이 아니다, 국가는 헤겔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류적 이념의 현 실태’이거나 ‘이성의 형상이나 현 실태’도 아니다. 오히려 국가는 일정한 발전 단계에 이른 사회의 산물이다... 국가는 그러한 사회가 해결 불가능한 자기 모순 관계에 빠졌으며 자신이 도저히 떨쳐버릴 수 없는 화해 불가능한 대립물들로 분열되었다는 사실에

2) 박상섭, 『자본주의 국가론』(서울 : 한울, 1985), 12쪽.

대한 승인이다. 허나 경제적으로 이 대립물들, 즉 경제적으로 서로 모순되는 이해 관계를 지닌 계급들이 자신과 사회를 무익한 투쟁을 통해 파멸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외관상 사회 위에 서있는 권력, 즉 갈등을 완화시켜 질서의 한계 내에서 제어할 권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권력, 사회로부터 생겨났지만, 사회 위에 서서 사회로부터 점점 더 소외되어 가는 이러한 권력이 바로 국가이다.<sup>3)</sup>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의 기본 입장은 국가는 계급 대립물들의 화해 불가능성에 대한 표현이며 그 산물이라는 것이다. 또 거꾸로 국가가 성립되었다는 것은 계급 대립물들이 화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하여 계급적 대립이 해소되면 국가도 소멸될 수 있다. 즉, 프롤레타리아가 국가 권력을 장악하여 생산 수단을 국유화함으로써 프롤레타리아로서의 위치를 철폐하고 모든 계급적 차이와 계급적 대립을 일소하고 나서 국가도 소멸시킨다는 것이다.<sup>4)</sup>

마르크스-엔겔스 이후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국가의 역할에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국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기본적으로 마르크스의 예상과 달리 자본주의체제가 자기 몰락의 길을 걷지 않고, 꾸준히 체제를 유지하거나 더욱 강화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학자에 따라 입장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자본주의 체제의 유지 과정에서 국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전통주의적인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국가가 자본

3) 엔겔스, “가족, 사유재산 및 국가의 기원”, 마르크스-레닌주의 연구소 편, 『마르크스·엔겔스 선집 II』(서울:백의, 1989), 366쪽.

4) 엔겔스, “공장에서 과학으로의 사회주의의 발전”, 마르크스-레닌주의 연구소 편, 『마르크스·엔겔스 선집 II』, 164쪽.

가 계급의 이해를 대변한다는 관점에서, 네오마르크스주의자들은 국가가 이념적 지배를 통하여 노동자 계급의 의식 형성을 저해한다는 관점에서 국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sup>5)</sup>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국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은 정확히 말해서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본주의의 발전과 고도화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국가이론을 사회주의 국가에 적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리가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현실 사회주의에서도 국가가 약화되거나 소멸되기는커녕 국가의 영역이 확대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념을 계승하여 국가사회주의를 현실화시킨 레닌도 근본적으로 마르크스-엔겔스의 국가론을 답습하였다고 볼 수 있다. 레닌은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국가는 사멸한다”는 명제가 전적으로 옳다고 하면서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구현되는 공산주의가 도래하면 국가의 필요성은 없어진다고 보았다.<sup>6)</sup> 궁극적으로 국가의 소멸을 인정하면서도 레닌은 국가론에 있어서 마르크스-엔겔스와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기본적으로 마르크스-엔겔스도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국가가 일정 기간 동안은 필요하다는 점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레닌은 프롤레타리아가 그들의 적인 부르주아지와 투쟁하는 과정에서 프롤레타리아가 국가를 필요로 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sup>7)</sup> 레닌은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가 필요로 하는 혁명적이고 잠정적인 형태의 국가의 필요성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

---

5) 마르크스주의의 국가론에 대해서는 박상섭, 『자본주의 국가론』; N. Poulanzas, 박병영 옮김, 『국가, 권력, 사회주의』(서울: 백의, 1994), 1장 참조.

6) 레닌, 문성원·안규남 옮김, 『국가와 혁명』(서울: 돌베개, 1992), p. 121.

7) 위의 책, p. 120.

억압 계급의 잠정적인 독재가 계급을 폐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착취자에 대항하기 위하여 국가 권력의 도구와 수단들을 잠정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레닌이 생각한 것은 혁명 과정의 국가의 역할이었으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였다. 국가사회주의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레닌 특히 스탈린 사후 소련을 포함하여 모든 사회주의 국가에서 당과 국가의 역할은 더욱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당적 지배라는 차원에서 국가의 확대라는 개념을 수용하지는 않았다. 레닌은 특히 인민 대중의 후진성을 지적하면서 사회주의 혁명을 주도할 전위당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당의 정치적 지도를 주장하였다. 특히 볼셰비키 혁명 이후부터 레닌은 과거 파리코뮌과 동일한 형태의 권력이라고 규정하였던 소비에트 기구와 당기구를 통합시켰다. 이로 인해, 소비에트는 그 충추적 역할을 상실하고 당의 하위기관으로 전락하였다. 이와 같은 권력 구조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었으나 내용적으로 본다면 당의 독재, 그리고 당을 장악하고 있는 일인 독재와 다름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당적 지배는 필연적으로 관료주의를 확대시켰으며, 국가기구의 확장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국가가 당의 지배를 받는다고는 하지만 국가기구가 체제의 중심이 되고, 이에 따라 일반 인민들이 권력으로부터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원인은 다르지만 사회주의체제의 국가의 확대는 자본주의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레닌 이후 집권한 스탈린은 국가 역할 확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대중 동원, 중앙집권적이며 지령적인 경제체제, 완고한 중앙집권주의, 행정적 방법을 통한 경영, 테러와 지도자의 종교적 절대성에 기초한 개인의 독재화, 문화-지적 생산의 모든 분야에 대한 정치적 감독 등을 특징으로 하는 스탈린주의체제는<sup>8)</sup> 2차 세계대전 이후 대부분의



신생 사회주의 국가의 모델이 되었는데,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경쟁과 산업화를 명분으로 하면서 정치적으로는 권력 집중을, 경제적으로는 국가기구에 의한 계획과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국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현상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체제 간에는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다. 산업화의 진전과 경제성장의 추구라는 사회 발전의 목표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에서 공통적으로 국가가 과대화되는 배경이 될 수 있었다. 또한 2차 세계대전 이후 양체제의 갈등 관계도 국가주의가 강화하는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국가의 계급적 토대는 양체제간에 차이가 있다. 자본주의에서는 학자에 따라 논란이 있으나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국가가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사회적 기반은 자본가 계급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사회주의 국가는 당적 지배를 받고 있으며, 사적인 축적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국가의 사회적 기반은 관료 혹은 당료라고 할 수 있다.

## 2) 시민사회론

시민사회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한 것은 근본적으로 국가의 확대와 관련이 있다. 국가의 확대는 대립항에 있는 시민사회의 위축으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서구자본주의의 경우는 자유주의 이론의 강화를 목적으로 시민사회가 강조되었으며, 제3세계의 재민주화, 동구권에서의 국가사회주의의 몰락, 서구에서 새로운 사회 운동의 등장을 경험하면서, 사회 진보의 관점에서 시민사회의 의미와 역할에 관한 논의가 부활하였다.

---

8) Graeme Gill, *Stalinism*(London : Macmillan, 1989) 참조.

자유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는 개인을 옹호하고 국가 행위를 제한한다는 전통을 갖고 있었다. 절대 군주에 반대하는 부르주아지 계급을 기본 세력으로 형성된 자본주의는 출발 자체가 절대 권력에 대한 반대, 시장의 형성과 시민사회의 성립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시민사회론과 친화력이 있다. 자유주의적 시민사회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국가와 사회를 대립시키는 2분 모델에 기초하고 있다. 국가에 대한 부정적인 전제로 인하여 국가를 최소화하고 사회를 최대화하기 위한 국가 권력의 사회적 통제를 이념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자유주의적 시민사회의 개념은 토크빌(Tocqueville)에 의해서 더욱 체계화되었다.<sup>9)</sup>

토크빌은 보통선거를 통하여 출발한 국가 권력도 민주적인 제도를 억압하고 자유를 박탈하는 새로운 국가전제주의로 변질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민주주의체제의 근본적인 불안정성을 지적하였다. 국가를 사회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보고 있는 토크빌의 주된 관심사는 민주주의 혁명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인 새로운 전제 국가의 출현을 막기 위하여 자유를 유지하면서, 정치 권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 토크빌이 제안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제도적 수준의 권력 분산이라는 차원에서 행정을 탈중심화하는 것과 독립적인 사법권의 보장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율적인 시민 단체(civil association)의 발달이었다.

자유주의적인 시민사회가 긍정적인 의미가 크다면 마르크스-엔겔스의 시민사회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의미가 크다. 마르크스는 자유주의 시민사회론이 경시하고 있는 경제 관계와 계급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마르크스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 자유주의

9) Alex de Tocqueville, 박지동 옮김, 『미국의 민주주의』(서울: 한길사, 1983) 참조.

적 시민사회의 개념을 착취와 지배에 기초한 자본주의 생산 관계를 은폐하는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라고 비판한다. 마르크스는 부르주아 사회로서의 시민사회는 경쟁과 소외를 통하여 인간의 자연적 유대를 해체시키고 공동체적인 요소 대신에 개인주의적인 요소를 강화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시민사회는 18세기 유럽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부터 나타났다고 보고 있다.<sup>10)</sup>

마르크스의 시민사회 개념도 기본적으로는 국가와 사회의 이분법적인 구분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를 경제 사회와 동일시함으로써 시민사회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르크스는 전통적인 신분 사회와 절대 국가에 대한 부정을 시민사회가 가질 수 있는 긍정적인 점으로서 인식하였다. 그의 부정적인 시민사회관은 전적으로 시민사회를 공장과 시장의 영역으로 생각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마르크스주의의 전통에 있으면서도 그람시(Gramsci)는 시민사회의 실체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그람시는 자본주의 시민사회를 단순히 부르주아 시민사회로 등치시킨 마르크스의 시민사회론을 반대하면서 토크빌의 마르크스주의화를 시도하였다. 시민 조직의 강화를 통하여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보호하려는 것이 토크빌의 문제 제기였다면, 시민 조직의 강화를 통하여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변혁시키는 것이 그람시의 문제 제기였다.<sup>11)</sup> 그람시는 노동자들의 적극적 동의에 의한 부르주아지 지배를 헤게모니로 개념화하면서 헤게모니가 사적인 세력, 즉 시민사회에 속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민사회는 계급 지

10) K. Marx, *Grundrisse*(New York : Vintage Books, 1973), p. 84.

11) 신광영, “시민사회의 개념과 시민사회의 형성”, 유팔무·김호기 엮음,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서울 : 한울, 1995), 92쪽. 그람시의 시민사회론에 대해서는 유팔무, “그람시 시민사회론의 이해와 한국적 수용의 문제”,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참조.

배를 재생산하는 국가와 동일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사회 변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헤게모니를 획득하기 위한 투쟁을 필요로 하게 되며 이를 통하여 시민사회는 역으로 체제 변혁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적인 전통에 있거나 반대로 자유주의적 입장에 있거나 시민사회론의 기본 전제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이분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억압적인 국가를 반대하는 점에서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다만 시민사회가 국가에 접합하는가 아니면 대립항으로서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는 입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나 현실 사회의 분석에 있어서는 국가에 대한 대립항으로서 시민사회를 보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하였듯이 현대에 들어와서 시민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배경이 국가의 확대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론적인 차원과는 별도로 역사적으로 경험하였던 시민사회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시민사회의 성립을 처음 경험하였던 것은 유럽의 근대라고 할 수 있다. 마르크스가 지적하였듯이 자본주의의 성립과 시장체제와 도시화의 진전, 그리고 신분제의 철폐에 따라 자유주의적 시민사회가 등장하였다. 그러나 유럽에 있어서도 개별 국가에 따라 시민사회의 형성 과정은 달랐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은 점진적인 정치적 발전에 의하여 시민사회가 형성된 반면, 프랑스는 급격한 혁명을 통하여 시민사회가 성립되었으며, 독일의 경우는 권위주의적인 국가와의 갈등을 경험하면서 시민사회의 성립이 지체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12)</sup>

유럽과 달리 아시아에서는 권위주의적인 문화 구조, 식민지 지배 경

---

12) 신광영, “시민사회의 개념과 시민사회의 형성”, 108~111쪽.

험, 중앙집중적인 권력 구조 등으로 인하여 시민사회의 형성이 쉽지 않았다. 특히 산업화의 진전 과정에서 과대 성장한 국가가 주도적인 위치를 갖게 됨으로써 국가와 시민사회의 갈등이 컸고, 봉건적 질서에서 자생적인 자본주의화를 경험하지 못한 결과 시민사회의 토대가 되는 부르주아지의 미형성은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에서 시민사회가 취약한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시민사회의 형성, 그리고 시민사회가 사회체제에서 갖는 위계가 국가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일차적으로 개별 국가의 역사적 경험의 차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떠한 근대화의 과정을 거쳤는가, 역사적으로 자발적 결사체와 같이 시민사회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전통이 존재하였는가, 문화적으로 국가로부터 개인을 분리시키는 가치가 존재하였는가, 산업화 과정에서 어떤 집단이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이들과 국가와의 관계는 어떠하였는가 등이 시민사회의 성격과 위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 경험과 더불어 시민사회의 특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는 산업화의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은 부르주아지가 왕권과 귀족과 결합하여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자유주의가 발달하지 못하였지만, 산업화의 진전 과정에서 점차 세력을 넓혀온 자유주의 집단을 중심으로 시민사회가 완성되었고, 개발 독재를 통하여 급속한 산업화를 완성한 제3세계 국가들도 정치적 억압체제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의 열망이 확산되면서 시민사회의 영역이 확대되었다.

### 3. 북한의 국가와 사회

#### 1) 북한체제에 대한 논의

지금까지 북한체제의 성격에 대한 논의는 다음의 몇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첫째, 북한체제를 일인독재체제로 규정하는 것이다.<sup>13)</sup> 북한은 수령을 중심으로 유일지배체제가 확립되어 있으며, 권력이 고도로 집중되어 있으며, 당이나 국가, 그리고 인민들도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는 주로 권력 구조, 특히 정치 과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전체주의로서 북한을 인식함으로써 일인 지배자가 어떻게 권력을 행사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사회전체를 강제하는가에 관심을 기울인다. 국가사회주의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현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까닭에 이와 같은 입장은 더욱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입장의 분석은 과학적인 틀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다분히 규범적 논의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 또한 현상에 대한 설명에서는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문제는 북한체제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한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변화는 숙청으로 대변되는 권력의 공고화 과정에 불과하다. 전체주의 사회는 권력의 핵심이자 체제를 결정하는 최고 지도자의 교체로 사회 변화가 가능하지만 북한의 경우 부자세습이라는 권력 승계가 이루어짐으로써 변화가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

13) 분단 이후 1970년대까지 북한 연구 대부분이 이러한 입장에서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강정구, “북한 연구사의 지식사회학적 검토”, 『통일시대의 북한학』(서울: 당대, 1996) 참조.

둘째, 권력 유지와 행사 과정을 중심으로 북한을 전체적 국가로 보는 견해이다. 이러한 논의에서 북한체제를 표현하는 말은 봉건제 국가, 가부장 국가, 신정 국가 등 여러 가지로 나뉘어진다. 봉건 국가로 북한을 표현하는 것은 북한의 군중 분류를 주목하면서, 출신에 따라 체제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일종의 신분제가 유지되는 체제로 보고 있다.<sup>14)</sup> 가부장적 국가론은 지도자와 인민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아버지로서의 수령은 자식들인 인민을 보살피고 있다는 것이며, 인민들은 사상 교양을 통하여 수령을 아버지로서 다르게 본다. 실제로 북한에서 아버지 수령, 어머니 당, 사회주의적 대가정을 내세움에 따라 가부장제 국가라는 개념은 설득력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신정 국가는 문자 그대로 김일성이 신적인 지위를 가지고 북한을 통치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경우 수령과 주체사상, 그리고 당을 3위 1체에 적용시키기까지도 한다. 김일성 사후 유훈통치가 지속되고, 불멸을 강조함에 따라 신정 국가도 일견 그럴 듯 하게 보이기도 한다. 북한을 전체 국가로 보는 견해들은 앞의 전체주의 국가론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같은 맥락에서 북한의 체제 변화에 대한 설명은 취약할 수밖에 없다. 또한 전체 국가가 역사적으로 전근대 사회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북한체제의 근대성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범적인 성향이 더욱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병영 국가 혹은 유격대 국가로 북한체제를 보는 입장이다. 이러한 관점은 북한의 권력 구조를 중심으로 보는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전체 사회체제의 조직화 및 작동 양식을 보고 있다는 점에서 앞의 입장들과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북한체제는 항일빨치산의 전통에서 출발하였으며 유일체제가 확립된 1967년에 현재의 국가적 성격이 완성된

14) 황장엽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서울: 한울, 1999) 참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유격대 국가란 유격대원을 모델로 하여 이를 전국국가적으로 확대시켜 김일성을 사령관으로 하여 전국민이 떠받드는 국가라는 것이다.<sup>15)</sup> 이러한 관점은 정치체제와 사회체제를 동시에 고찰하고 있으며, 역사적 변화 과정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북한체제의 성격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관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체제의 작동 원리를 하향적인 방향에서 보고 있는 경향이 있으며, 동시에 북한적 특수성을 과도하게 강조한 나머지 변화에의 전망을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있다.<sup>16)</sup>

넷째, 사회주의체제의 하나로서 북한을 보는 입장이다. 북한이 채택한 사회 발전 전략이 사회주의 산업화이기 때문에 북한은 근본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북한의 김일성 중심의 유일지배체제는 기본적으로 스탈린주의의 한 유형으로 파악된다.<sup>17)</sup> 사회주의적 공업화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경제학적인 입장에 서있다고 할 수 있다. 스탈린주의의 국가로서 북한을 보는 것은 무엇보다도 규범적 입장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비교 방법을 통하여 북한체제가 갖고 있는 특성을 객관화시킬 수 있으며, 탈스탈린화라는 관점에서 북한체제의 변화를 전망한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 반면에 여타 국가사회주의체제와 달리 북한이 여전히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원인에 대한 설명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볼 수 있다.

15) 와다 하루끼, “유격대 국가 북한의 성립과 전개”, 『극동문제』(1993. 12).

16) 북한 연구에서 특수성에 대한 문제는 유격대국가론에서만 대두되는 것은 아니다. 주체사상에 대한 논의나 수령론에 대한 논의도 특수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박형중, “북한 정치연구”, 북한연구학회 엮음, 『분단반세기 북한 연구사』(서울: 한울, 1999), 참조.

17) 박형중, 『북한적 현상의 연구: 북한 사회주의 건설의 정치경제학』(서울: 연구사, 1994) 참조.



북한체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는 전반적으로 정치화 혹은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있으며, 기본적으로 권력 유지 과정을 중심으로 북한체제를 성격 지우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입장에 따라 다소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지도자와 당을 중심으로 권력은 고도로 통합되어 있으며, 체제 변화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희박한 것으로 북한을 바라보고 있다. 국가와 사회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국가가 압도적인 위상을 갖고 있으며, 사회 혹은 시민사회는 거의 무의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 2) 사회주의와 시민사회론

국가사회주의 몰락이라는 환경 변화는 북한체제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주된 관심은 북한체제는 존속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민사회론이 하나의 대안적 관심으로 부각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18)</sup>

시민사회론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체제를 대상으로 발전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사회주의의 몰락 과정에서 시민사회론은 사회주의권 분석에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19)</sup> 그러나 국가사회주의 사회구성체의 기본 원리가 자본주의의 그것과 다르기 때문에 사회주의체

18) 서재진, 『또하나의 북한사회』(서울: 나남, 1995); 안청시·김근식, “사회주의 시민사회론과 북한시민사회의 형성 가능성”,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16권 2호(1994)가 대표적인 글이다.

19) N. Bobio, *Which Socialism?*(London: Tavistock, 1987); J. Kenane, *Democracy and Civil Society*(London: Verso, 1988) 참조. 그러나 이와는 달리 국가사회주의의 몰락을 사회주의의 원칙 훼손에서 보는 입장도 있다. R. Miliband, “공산주의 정권의 위기에 관한 성찰”, R. Blackburn et.al, 김영희 외 옮김, 『몰락 이후』(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4) 참조.

제에 대한 시민사회론의 적용은 조심스러운 논의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론의 사회주의체제 변혁에 적용될 수 있는 바탕은 역시 국가와 시민사회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자유주의적 시민사회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시민사회론을 확대시켜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비판과 체제 변혁을 추구하였던 그람시의 도식에서 부르주아 국가가 공산주의 당국가체제로 변화하면서 극복의 대상이었던 자본가 계급은 사회주의 국가의 노멘클라투라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20)</sup>

시민사회론의 입장에서 국가사회주의의 몰락을 설명하는 경우 주목해야 할 것은 국가와 대비하여 혹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사회 영역의 존재 여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동유럽의 지식인 집단에 대하여 관심이 모아진다. 체코슬로바키아의 77그룹, 헝가리 콘라드가 중심이 된 반정치론과 시민포럼이 예가 된다. 지식인 집단의 범주에 넣기는 어렵지만 폴란드의 자유노조도 당국가체제에 대립하는 사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동구 국가들의 역사적 경험도 중요한 고려 대상이다. 즉, 이들 국가들에서 시민사회의 경험이나 민주 사회의 경험이 있었는가 혹은 사회주의 체제 성립 이후 시민 운동의 역사가 있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 체코, 폴란드, 헝가리의 반소 저항 운동은 시민사회 성립의 중요한 역사적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산업화 혹은 경제성장의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적 산업화도 결과적으로 사적인 영역을 불가피하게 증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세대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집단주의에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세대를 출현시키며, 공업화와 도시화의 확대도 의사소통의 활성화와 네트워크의 증가로 사적인 영역을 확산시킨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자유주의적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서구자본주의 문화의 유입도

20) 안청시·김근식, “사회주의 시민사회론과 북한시민사회의 형성 가능성”, 143쪽.

시민사회 영역의 확대를 촉진시킨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체제 자체의 효율성 저하를 생각할 수 있다. 효율성 저하는 기본적으로 경제성장의 침체와 이로 인한 정당성의 위기를 의미한다. 사회주의적 산업화가 한계를 보이게 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안을 국가가 제시하지 못할 경우 기존의 당국가체제는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고, 시민사회의 성장이 촉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 3) 북한과 시민사회론

국가사회주의 몰락을 설명하는 시민사회론을 고려할 때, 북한체제의 시민사회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준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에서 당국가체제 내에서 사적인 영역, 특히 시민사회 조직이 존재하고 있는가?

둘째, 북한에서 시민사회 형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끼칠 수 있는 역사적 경험이 있는가?

셋째, 북한에서 산업화의 수준은 어느 정도 진전되었으며, 산업 사회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가?

넷째, 북한에서 시민사회 형성을 촉진할 수 있는 문화적 유입이 가능한가?

다섯째, 북한체제의 효율성 위기는 어느 정도 인가?

#### (1) 시민사회 조직

북한은 고도로 통합되어 있는 사회체제이다.<sup>21)</sup> 통합되어 있다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으로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

니다. 당을 중심으로 각종 사회 단체, 경제 조직, 관료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통합되어 있으며, 사회구성원도 사상 교양과 중복된 조직 생활을 통하여 체제에 통합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사회 조직도 당적 지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따라서 공식적인 사회 조직에서 국가로부터 독립된 사적 영역을 찾을 수가 없다.

북한에서 1980년대 말부터 ‘이·미용사협회,’ ‘바둑 협회’ 등 비정치적 사회 조직이 생겨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협회들은 과거의 사회 조직과 달리 당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는 것이 아니다. 또한 동일한 취미나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조직으로 정치적 지향성도 약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국가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시민사회 조직의 출발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 조직이 형태적으로 일정 수준 당이나 국가와 유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sup>22)</sup> 기능이나 역할, 그리고 운영이 독자적인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각종 조직들이 어느 정도 범위에서 조직화되어 있는가도 불분명하고, 중요한 정치적 사건 등에 이들 조직이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는 근거도 없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조직들이 생겨났다거나 기존 조직의 활동이 새롭게 부각되는 경우도 거의 없다.

동호인이나 동일 직종 중심의 사회 조직을 제외한다면 북한의 사회 조직으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종교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천주교나 기독교, 그리고 불교와 천도교 등 북한에서도 일정한 수준의 종교 활동이 보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종교를 중심으로 한 사회 조직도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sup>23)</sup> 시민사회의 성장 과정에서 종교 조직이 기여한

21) 사회통합의 형태에 대해서는 이우영, 『전환기의 북한 사회통제체제』(서울: 통일연구원, 1999) 참조.

22) 형태적으로도 완전하게 국가와 분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바둑협회의 경우 국가체육위원회 산하 기구이다.

23) 1945년 결성된 ‘조선불교도연맹’을 시초로 ‘조선기독교도연맹(1946),’ ‘조선천도교 중

바를 고려한다면 북한의 종교 조직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종교에 대하여 비판적이었으며 1980년대 말부터 각종 종교 조직이 활성화된 것도 대남사업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종교 조직들은 형태에 상관없이 당과 국가의 엄격한 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비공식적인 사회 조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범죄 조직의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지역을 기반으로 일종의 범죄단이 있다고 한다.<sup>24)</sup> 또한 고등중학교 등 청소년의 일탈 조직의 존재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사회 조직이라기보다는 일차적 사회 집단의 수준인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종의 반체제 결사 조직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겠으나 이들을 포함하여 현재 북한의 비공식적 사회 조직들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즉 체제 변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사회 조직의 존재를 현 단계에서 기대하기는 어렵다.

독립적인 시민사회의 조직을 주도할 수 있는 지식인 집단의 경우도 체제이념에 충실하고 있으며, 체제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개인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개인적인 불만이 조직화될 수 있고, 체제이념과 반대되는 혹은 최소한 체제이념에 비판적인 논의가 소통될 네트워크 구조도 극히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언론에 대한 안벽

---

양지도위원회(1946), '조선천주교인협회(1988)' 등이 있으며, 각종 종교조직을 망라한 '조선종교인협의회'는 1989년에 창립되었다.

24) 북한에서 절도를 주로 하였다는 탈북자 자씨의 증언에 따르면, 지역을 중심으로 범죄단이 있다고 한다. 절도범들은 은어로 '꼬마'라는 말을 쓰며, 지역별로 '평양꼬마(평꼬)', '사리원꼬마' 등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의 조직화 수준은 자본주의 국가들의 조직범죄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일종의 느슨한 동업자 조직으로 범죄시 개인적인 도움을 준다거나, 피신처를 제공하는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위계 관계나 역할 분담이 분명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사회 조직의 기본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한 통제도 이러한 상황을 대변하고 있으며, 대안언론이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도 찾기 어렵다.

전반적으로 북한의 시민사회 조직은 변동을 추진할 만큼 성장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대 말부터 생겨난 각종 동호인 조직이나 종교 조직의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변혁을 추동하는 사회 조직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기존 북한의 사회 조직이 이러한 경향성을 띠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2) 역사적 경험

동구 국가사회주의의 전환 과정에서 보았듯이 시민사회의 성립에서 역사적 경험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시민사회의 경험 혹은 근대적 시민 운동의 경험이 있는가에 따라 시민사회의 성립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변화의 성격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북한 역시 전근대적 권위주의 체제에서 식민지 경험을 거쳐 바로 사회주의체제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근대적 시민사회를 경험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전근대 사회의 유교적 전통이나 일제하의 식민지 경험은 북한에서 국가와 시민사회와의 일체감을 강화시키는 조건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저항의 경험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조선후기의 민중봉기의 경험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후기의 민중봉기의 경우에는 근대적 시민 운동이라기보다는 봉건적 착취에 따른 일시적인 저항 운동의 성격이 강하다. 더욱이 지역적으로도 운동의 중심은 현재의 남한 지역인 삼남 지방이었다. 이 밖에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일제하 반제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일제하

반제투쟁을 일종의 근대적 시민 운동의 범주에 포함시킨다면 북한에서도 시민 운동의 경험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만주나 함경도 지방 중심의 항일무장투쟁이나 중국 등지에서의 반일투쟁의 경험이 북한에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현재 북한국가체제의 성립 배경이 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일성 - 김정일 지배체제의 인적 토대는 항일무장 혁명 세력이고 이것이 국가적 정통성을 구축하는 토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일제하 반제 운동의 경험이 국가의 대립항으로서 시민사회 성립의 배경이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평안도 지방을 중심으로 뿌리를 내린 기독교 세력의 존재를 생각할 수 있다. 일제 시대부터 숭실학교 등을 중심으로 개신교가 광범위하게 자리잡았고, 이들은 3·1운동 전후로 민족 역량 강화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숭실학교가 남쪽으로 이주하였듯이 해방 이후, 그리고 전쟁 이후 과거 기독교 운동이나 교육 중심 세력들은 정치적으로 숙청당하였거나 자진 월남하였다. 따라서 근대 이후 일제하까지 평안도를 중심으로 구축되었던 기독교 세력의 역사적 경험은 북쪽에서 계승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북한 당국이 기독교를 지속적으로 통제하여 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 북한 사회에서 개신교 조직이나 개신교 근대화 운동의 영향이 거의 없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역사적 경험은 미미한 반면, 국가주의를 강조할 수 있는 역사적 경험은 상대적으로 풍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일제의 경험은 반제의식을 고양하는 토대가 되었고, 강력한 반제의식은 국가중심주의를 정당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전쟁을 통한 전시체제의 구축도 국가를 중심으로 주민들을 통합시키는 역사적 경험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전쟁 이후 대결 상태가 지속되

면서 극단적인 반미(반서) 성향은 서구적 시민사회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시켰다고 할 수 있다. 전후복구와 사회주의적 산업화도 국가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것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특성과 더불어 시민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또 다른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25)</sup>

### (3) 산업화의 수준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조건의 하나는 산업화의 진전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현재 북한은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경험하고 있지만, 사회주의적 산업화에는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전쟁에도 불구하고 농업 중심에서 공업 중심으로, 그리고 도시 중심의 산업화가 성공적으로 이룩되었고, 사회체제도 근대 산업 사회로 진입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새세대’로 표현되는 산업화 이후의 세대가 등장하였고, 이들은 현재 북한 지배층이 가장 주목하는 사회 집단의 하나이다. 산업 사회로의 진전은 일정한 수준의 사회적 분화를 초래한다. 전문직과 같은 새로운 중간 계층이 성장하여 사회적으로 중요한 집단으로 대두되고, 새로운 세대와 기존 세대가 세대 갈등을 야기하고, 도시와 농촌 간에도 사회적 긴장이 야기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에서도 예외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새세대가 정치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것은 역으로 말해서 이들이 기존 세대와는 다른 정치적 지향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980년대 이후 북한 문학예술에서 빈번하게 강조되는 농촌 생활의 중요성은 북한 주민들의 도시 집중 성향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강조되는 정보산업은 대표적으로

---

25) 남북한이 각각 사회 발전의 이념적 토대로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채택하였지만, 국가 주도의 계획경제였다는 점은 공통적이었다. Byoung-Lo Philo Kim, *Two Koreas in Development*(New Brunswick : Transaction Pub., 1992) pp. 53~64.



전문기술직이 증시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산업 사회의 단계에 진입하고, 일정한 수준에서 산업 사회적인 징후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시민사회의 형성을 동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북한의 산업화가 스탈린주의적 산업화 즉, 당과 국가가 철저히 통제하는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것은 산업화가 진전된 만큼 사회적 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남한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강력한 중앙집중적인 개발독재체제에서 고도의 산업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회적 분화는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체제나 사회 체제에서 사회적 분화가 진전된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수준의 사회적 분화는 지체되었다는 것이다.<sup>26)</sup> 북한의 경우는 이러한 경향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강력한 사회통제체제는 산업화와 동반되는 구조적 분화를 억제하거나 최소한 정치적 분화는 막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중국 등과는 달리 전문관료에 비해서 당(이념)관료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다. 따라서 비록 사회 변화의 구조적 압력에 의하여 새로운 계급(전문가 등)이 형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사회 변혁을 주도하거나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사회적 분화와 이의 결과로 출현하는 시민 계급의 성장은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되는 만큼, 사회 통제체제로 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즉, 궁극적으로는 시민 계급이

---

26) 남한 사회에서 시민사회 혹은 시민계급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1987년도 6월 항쟁부터라고 볼 수 있다. 1960년대부터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시민사회가 태동되었고, 1970년대 유신시대로부터 국가와 시민사회와의 갈등이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체제 변혁에서 시민 계급이 일정 부분을 담당하고 중요한 세력으로 기능하기 시작한 것은 이 시기부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조희연, “민중운동과 ‘시민사회’, 시민운동”, 유팔무·김호기 엮음,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316~324쪽 참조.

성장하고 이들의 정치사회적 중요성이 증대한다는 것이다.

#### (4) 외부 문화 유입의 가능성

북한체제가 구조적으로 시민사회 형성에 부적합하다고 하더라도, 외적인 변수가 시민사회의 형성을 촉발할 가능성도 있다. 더구나 현재 북한은 시민사회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산업화의 진전 등 그 토대는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시민사회의 경험이나 시민 운동의 이념이 유입된다면 시민사회의 형성이 촉진될 여지가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동구에서 보았듯이 시민사회의 경험이나 이념은 문화의 유입과 더불어 전파된다는 점에서 외부 문화의 유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중요한 문제일 수가 있다.

그러나 북한체제는 기본적으로 폐쇄사회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폐쇄정책은 대내외적인 차원에서 모두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바탕 하에서 외부의 문화에 대해서는 지극히 배타적이다. 자본주의 문화에 대한 적개심은 말할 것도 없고, 주체사상의 기치 아래 여타 사회주의 국가의 문화에 대해서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 당연히 외부 인사의 수용에도 조심스럽고,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도 지극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북한 사람과 접촉할 수 있다. 외부 매스미디어에 대한 통제도 철저하다. 또한 내부 차원에서는 사회 이동의 엄격한 통제와 같은 내적인 폐쇄정책으로 새로운 문화의 비공식적 유통마저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외부에서 문화가 유입되는 경우에도 사회적으로 확산되기는 어려운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최근 북한 문화정책의 변화는 과거와는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1992년 출간된 김정일의 『문학예술론』에서 과

거 비판의 대상이었던 이광수 등의 근대 초기 문학예술이나 카프의 문학예술, 그리고 실학파의 작품까지 포용한 이후 셰익스피어의 소설 등 서구 문학예술 작품들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등 수용할 수 있는 문학예술의 폭을 점차 확대하여왔다는 것이다.<sup>27)</sup> 여전히 자본주의적 경향이 강한 대중예술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지만, 남북정상회담을 전후로 문화적 개방의 폭은 심화되어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001년 태양절을 맞이하여 개최된 축전에 참가한 남한 대중 가수 김연자 씨의 공연이 조선중앙TV를 통하여 녹화 방영되고, 각종 매체에서 극찬을 한 것은 기존의 폐쇄적인 문화정책과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28)</sup> 또한 지난 6월에 조선중앙TV를 통하여 방영된 러시아 영화 ‘러시아식 사랑’의 방영은 국가사회주의 몰락 이후 동구 영화를 거의 수입하지 않았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만한 사안이며, 또한 영화의 선정성 등이 과거 북한 문학예술에서 볼 수 없었던 수준이었다는 점에서도 북한 문학예술정책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상회담 이후 활발해진 남북한 사회 문화 교류와<sup>29)</sup> 이산가족의 상봉, 점차 확대되는 남북경협도 외부 문화 유입을 불가피하게 하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올 초부터 북한이 전략사업으로 천명하고 있는 정보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터넷과 같은 정보 인프라의 구축이 필수적이며 이것은 외부 문물의 급속한 유입을 동반할 수밖에

27) 북한 문학예술정책의 변화 형태에 대해서는 이우영, “문학예술을 통해서 본 김정일 시대의 북한”, 『경제와 사회』, 49(2001), pp. 113~119 참조.

28) 김연자 공연은 녹화 중계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해설하는 특집 방송이 편성되었고, 기타 매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다루었다. 이에 대해서는 이영미, “김연자 공연이 말해 주는 것 : 2001년 상반기 대중적 공연물 교류의 허와 실”, 문화정책개발원, 『2001 통일문화정책 제6차 포럼』(2001. 7) 발표 논문 참조.

29) 정상회담 이후 사회문화 교류에 대해서는 김귀옥·김정훈, “남북교류를 통한 사회·문화 교류의 확대와 통일의 전망”,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한 사회통합 : 현황과 전망』(한국사회학회 주최 심포지엄, 2001. 5. 25) 참조.

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외부 문화는 앞으로도 급속하게 북한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외부 문화 유입은 현재까지는 시민사회의 형성을 촉진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개방을 지향하면서도 북한은 '모기장'론을 강조하면서 불순한 외부 문화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경계하는 정책을 펴왔다고 볼 수 있다.<sup>30)</sup> 그러나 '모기장'은 창문을 연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며 이는 외부 문화를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부 문화가 유입되면 통제를 엄격히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서구적 가치, 자본주의 이념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적극적으로 경제를 개방한다는 것도 결국 자본주의 국제시장으로의 편입을 가속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북한 사람들과 외부 사람들과의 접촉도 늘어나게 되며, 사람을 통한 문화 전파도 확산된다고 볼 수 있다.

외부 문화의 유입이 확대되는 것이 곧 바로 시민사회의 형성으로 이어진다고는 할 수 없으나, 시민사회가 형성될 이념적 토대가 마련되는 것은 분명하다. 장기적으로 다른 사회 구조적 요인과 결합되면 이러한 경향성은 더욱 촉진될 수 있다.

#### (5) 체제 효율성

국가사회주의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현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 만큼 체제의 효율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심각한 식량난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제 붕괴

---

30)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기관지 『청년전위』는 사실을 통해 “청년들 속에 밖으로부터 반동적이고 퇴폐적인 부르주아 도덕과 생활풍조가 침습하지 못하도록 모기장을 든든히 치는 동시에 그것이 발을 붙일 수 있는 온상인 낡은 도덕과 생활양식을 뿌리 뽑기 위한 조직적인 통제와 사상투쟁을 끊임없이 강하게 벌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청년전위』, 2001년 5월 25일.

는커녕 체제의 급격한 전환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다. 북한체제가 경제난을 겪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현 체제가 효율적인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최소한 대내외적인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체제를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최소한 체제 유지 능력은 탁월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체제 유지 능력의 핵심은 사회통합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일을 중심으로 정치 권력이 고도로 집중되어 있고, 이를 바탕으로 군을 포함한 강력한 물리력은 사회통제를 유지하는 첫번째 기제라고 할 수 있다. 강력한 사회통합을 유지하는 두번째 기제는 사상통제체제라고 할 수 있다. 유일지배체제와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전체 사회구성원들을 이념적으로 통합하고 있으며, 11년제 의무교육체제와 ‘총화’로 대변되는 반복적인 사회교육체제는 사상적 통합의 물적 토대라고 할 수 있다. 문학예술을 포함한 언론을 당이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는 것도 사상적 통제체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사회통제체제의 세번째 축은 조직을 통한 통제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조직에 대한 통제는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북한에서는 구성원들을 둘 이상의 조직에 속하게 하고, 각종 조직은 당이 지도하면서 완벽한 통제체제를 구축하였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사회통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데는 항일투쟁의 경험이 있는 김일성의 집권으로 정당성 확보, 전쟁으로 반체국주의 분위기 고양 등의 역사적 요인들도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체제와 이에 바탕을 둔 사회 발전 전략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초기 성공적인 공업화의 결과 통제기제를 작동할 수 있는 물리적 토대가 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완벽한 배급체제를 완성하는 등 사회적 통제와 사상적 통제에 정당성이 부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지속되고 있는 심각

한 식량난으로 대변되는 경제 위기는 북한체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특히 분배제도의 기능저하는 농민시장, 텃밭 등 사적인 생산 영역을 확대시킴으로써 사적 영역이 발생할 조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31)</sup>

또한 분배제도의 붕괴는 식량 획득을 명분으로 한 사회 이동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사적인 의사소통 구조가 확장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가운데 일반 주민들의 의식도 균열을 일으켜 공식적으로 사회이념과 일반인의 생각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sup>32)</sup>

체제 유지의 문제는 북한 지배층의 가장 핵심적인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비교적 효과적으로 그들의 관심사가 관철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제 파탄으로 대표되는 현재의 체제 위기가 극복되지 못한다면 체제 통합의 효율성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물론 현재의 체제 위기는 경제적인 차원에 국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전히 정치적으로는 정당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사회통제체제는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전체 사회체제에서 하나의 하위체제의 문제는 연쇄적으로 다른 하위체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북한 외부에서는 미흡하다고 보고 있으나 북한이 추진하는 개방정책은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자본주의 국제시장에의 편입을 가속화하는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자본주의적 요소의 도입을 의미한다. 이것은 현재의 체제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한다고 하더라도 사회 구조의 본질적인 차원에서의 체제 변혁을 요구하는 구조적 압력이 점차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31) 북한 경제의 시장부분이 50% 이상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남성욱·문성민, “북한의 시장 경제 부문 추정에 관한 연구 : 1998년을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3권 1호(2000), 149~215쪽.

32)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 305~308쪽.

## 4. 맺음말

엄격하게 본다면 북한에 시민사회론을 적용시키기에는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 여전히 당적 지배를 받고 있는 국가가 지배적이며, 전통적인 개념의 사회 영역은 커다란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시민사회의 역사적 문화적 경험도 부재하고,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사회 조직도 존재하지 않는다. 강력한 폐쇄정책과 반서구적인 정치사회화는 자유주의적 가치를 담고 있는 외래 문화의 유입과 수용을 거부한다. 식량난으로 체제의 효율성은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정치적 정당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사회통합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시민사회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산업화의 진전은 불가피하게 시민사회 형성의 기본 토대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새세대의 등장은 단순히 새로운 세대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 문화에서 4세대 작가들이 보이고 있는 지향성은 이전 혁명 세대들의 문화적 지향과 분명히 다르다. 국가 주도의 산업화가 서구와 같은 새로운 전문가 집단을 만들지는 않겠지만, 기술 중심적인 실용주의적 전문가의 형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는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이 처한 체제 위기가 불가피하게 자본주의 중심의 세계체제로의 편입을 강제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전히 '모기장'을 통하여 자본주의 문화의 유입을 경계하고 있으나, 자본주의 문화의 도입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현재 체제 위기 극복을 위하여 강요받고 있는 개방은 체제의 개혁을 동반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시민사회의 또 다른 조건이 될 수 있다. '바둑애호가협회', '이·미용사협회' 등 1990년대부터 생겨난 새로운 사회 조직들은 점차

로 국가와 거리를 두게 될 것이고, 기존의 '문화가 동맹'과 같은 지식인 중심의 사회집단은 새로운 세계관을 경험하면서, 독자적인 견해를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현 단계에서 북한체제가 개혁과 개방을 촉진하는 것이 경제난으로 대표되는 체제 위기를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현재 북한 권력 구조의 공고화를 위하여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새로운 시민사회의 성립이 또 다른 종류의 체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체제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국가 중심적 관점은 북한의 특수성을 잘 설명해 준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 구조의 변화 등 체제의 역동적 변화 양상 등을 놓칠 수 있는 까닭에 정태적인 분석에 머무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과거 반공주의적 분위기와 어우러져 북한정체론의 바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변화를 경험하지 않는 사회체제는 어디에도 없다. 북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북한이 변하는가 아닌가 하는 인식론적인 논쟁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좀더 과학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시민사회론의 관점은 현 단계 북한의 상황과 부합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변화의 양상을 분석하는 데는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1차 자료>

김정일, 『주체문학론』(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2차 자료>

장정구, 『통일시대의 북한학』(서울 : 당대, 1996).

김영희 외 옮김, 『몰락 이후』(서울 : 창작과 비평사, 1994).

남성욱 · 문성민, “북한의 시장 경제 부문 추정에 관한 연구 : 1998년을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3권 1호(2000).

레닌, 문성원 · 안규남 옮김, 『국가와 혁명』(서울 : 돌베개, 1992).

마르크스 - 레닌주의연구소 편 『마르크스 · 엥겔스 선집Ⅱ』(서울 : 백의, 1989).

박상섭, 『자본주의 국가론』(서울 : 한울, 1985).

박형중, 『북한적 현상의 연구 : 북한 사회주의 건설의 정치경제학』(서울 : 연구사, 1994).

백낙청, 『분단체제 변혁의 공부길』(서울 : 창작과 비평사, 1994).

북한연구학회 엮음, 『분단반세기 북한 연구사』(서울 : 한울, 1999).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 사회』(서울 : 나남, 1995).

유팔무 · 김호기 엮음,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서울 : 한울, 1995).

이우영, 『전환기의 사회통제체제』(서울 : 통일연구원, 1999).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서울 : 한울, 1999).

Alex de Tocqueville, 박지동 옮김, 『미국의 민주주의』(서울 : 한길사, 1983).

Bobio, N., *Which Socialism?*(London : Tavistock, 1987).

Kenane, J., *Democracy and Civil Society*(London : Verso, 1988).

Kim, Byoung-Lo Philo, *Two Korea in Development*(New Brunswick : Transaction Pub., 1992).

Gill, Graeme, *Stalinism*(London : Macmillan, 1989).

Marx, K., *Grundrisse*(New york : Vintage Books, 1973).

N. Poulantzas, 박병영 옮김, 『국가, 권력, 사회주의』(서울 : 백의, 1994).

(Abstract)

## The Nation and Society in North Korea: Is the Civil Society Theory Applicable?

Woo Young Lee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Sociology)

An increase in the interest toward civil society theory is fundamentally tied to the expansion of a nation since this expansion leads to the withering of civil society. Under this circumstance, Western capitalism, based on an ideology of liberal democracy, places emphasis on civil society for the purpose of reinforcing liberalism. The re-democratization of Third World countries, collapse of national socialism in the East European bloc, and emergence of a new social movement in Western Europe revived the argument of the meaning and role of civil society in social progress. Civil society theory is a theory developed basically from a capitalist system perspective. However, civil society theory was used for the analysis of the socialist bloc during the collapse of national socialism. From the perspective of civil society theory, the collapse of national socialism mainly emphasizes the existence of social sectors, which existed independently from the nation.

There are several standards to gauge whether North Korea is a civil society, based on the explanation of the collapse of national socialism. They are as follows:

First, is there a private sector in North Korea, particularly a civil society organization, in addition to the existing party system?

Second, is there any historical experience that may positively influence the formation of a civil society in North Korea?

Third, to what degree has industrialization in North Korea progressed, and is there any sign of the North entering into an industrial society?

Fourth, is there any possibility of cultural influx in North Korea to promote the formation a civil society?

Fifth, how serious is the degree of inefficiency in the North Korean regime?

Strictly speaking, there are several problems when applying civil society theory to North Korea. North Korea is a country that is controlled by a party system and a private sector that is based on a traditional concept that has no foundations. In addition, there have been no historical or cultural experiences that have allowed for a civil society or the allowance of a liberal social organization free from political control. North Korea's strong closed policy and anti-Western political socialization prohibits the influx of foreign culture in fear of bringing with it liberal values. Although regime efficiency hit a low due to the food shortage, North Korea still maintains its political legitimacy and social integration.

Nevertheless, we cannot eliminate the possibility of the existence of a civil society in North Korea. Above all, industrial development inevitably forms the basis of a civil society. The emergence of a new generation does not

simply signify that a new generation will be institutionalized. Intentions shown by writers of the fourth generation in North Korean culture are obviously different from cultural directivity shown by the former generation of revolutionists. Although industrialization led by a nation will not lead to the organization of a new expert group, it cannot fundamentally block the formation of technology-centered practical experts. Moreover,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crisis in North Korea inevitably forces its regime to be part of a world system. Although North Korea is still very cautious about the influx of capitalist culture through a so-called mosquito net, it would be difficult to contain the introduction of capitalist culture. Furthermore, North Korea's opening, forced by the urgency to overcome the existing regime's crisis, will be inevitably accompanied by its regime reform, and this could be another condition for establishing a civil society. New social groups organized in the 1990s, such as the Association of Baduk Lovers and Association of Barbers, will become more distant from the closed society and social groups made up of intellectuals, such as the existing Literate Union, will possibly have independent opinions of their own by experiencing a new world point of view.

From a long-term perspective, although it would be helpful for North Korea to promote reform and opening to overcome its crisis, which is mainly caused by economic difficulties, and to ultimately consolidate its power structure, it might also result in another kind of regime crisis with the establishment of a new civil society.

Key words: North Korea, Civil Society Theory, Social Change.